

2015년 최선진국 진입을 일본의 개혁

* 이 자료는 이와다 카즈마사(岩田一政)일본연구센터 이사장이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50년 후 일본 최선진국을 향한 개혁집중('14.11.9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일본의 성장률은 각국의 트렌드를 하회
- 축소균형을 피하기 위한 인구 유지와 생산성 향상 중요
- 대학 벤처를 축으로 한 혁신에 주력

☆ 일본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「선택하는 미래」위원회 보고서가 11월 14일 발표

☆ 50년 후 일본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한 축소재생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1억 인구의 유지,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, 일본의 잠재력을 활용한 일본브랜드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경로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

□ 인구감소로 최적 성장경로에서 이탈하고 있는 일본

- 50년 후 일본의 인구규모는 2013년 1억 2,730만 명에서 8,657만 명(2/3수준)으로 감소, 연간 100만 명씩 감소
- 일각에서 좁은 국토에서 인구 감소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으나,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는 인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하지 않음
- 한 나라의 최적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경제이론은 없으나, 개인 소비를 최대화하는 동태적인 성장경로에서는 자본수익률과 노동투입증가율이 같다는 점은 이른바, 황금률경제로 잘 알려져
 -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가 공존하는 경제에서는 최적 노동투입 증가율은 퇴직세대의 소비 크기에 의존하고 있음
- 노동투입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것은 일본이 최적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

□ 성장을 위해 1억 인구 유지는 필수

- 일본정부가 50년 후에 1억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성장전략에 담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
-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GDP수준과 1인당 GDP증가율은 우하향의 관계에 있음
 - 1인당 GDP의 초기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(가설)
- 일본은 2000년 이후 이 같은 우하향 트렌드 곡선에서 하방으로 괴리되고 있음
 - 일본의 1인당 실질 GDP수준도 상위 10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으며, 이 같은 우하향 관계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(총요소생산성)수준과 증가율에도 적용
 - OECD의 2060년 예측에 의하면 2011년 일본의 생산성 수준은 미국의 절반정도

□ 저출산·고령화로 노동투입, 자본투입 모두 감소

- 일본의 생산성과 1인당 실질GDP가 수축가설이 시사하는 우하향 트렌드 곡선을 하회하게 된 원인은 2가지
 - 1990년대 후반이후 근로세대가 감소
 - 인간의 두뇌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이른바 「제2의 기계시대」라는 글로벌 혁신의 조류에 대응이 늦음
-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,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인 노동투입은 이미 마이너스임
 - 동시에 저출산·고령화는 저축을 감소시켜 생활하는 퇴직세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가계저축률을 저하시켜 자본투입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
-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예측에 따르면, 2020년에는 가계저축률이 현재 2%에서 마이너스 3%로 저하
 - 국내투자가 국내저축을 상회하면, 일본은 경상적자를 감수해야 함
 - 그러나 거시적인 저축률인 순국민저축률은 이미 미국과 같이 거의 제로임

□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

-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세대의 인구감소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인데, 실증연구에 의하면, 1%의 근로세대 인구감소는 생산성을 0.3%저하시킴
- 2000년대의 생산성 평균 상승률은 0.6%로서, 인구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성 상승률은 조금 높았을 것임
- 프랑스는 1970년대에 출생률 저하에 직면함에 따라, 국가의 위기, 나아가 프랑스 문화의 소멸위기를 피하기 위해 양육정책을 실시한 결과, 출생률을 1.6에서 2.0으로 상승

□ 1억 인구 유지를 위한 방책

- 일본이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 초에는 출생률을 1.4에서 2.1로 높일 필요가 있음
-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엔, 즉 소비세율 5%분의 비용이 듦
- 「선택하는 미래」위원회 보고서에서 2020년대 초에 걸쳐 급부를 현재의 6조 엔에서 12 조 엔으로 배증을 제안

□ 근로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철폐해야

- 근로여성을 지원하여 양육환경이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가 철폐되어야 함
- 배우자공제·배우자특별공제와 제3호 피보험자제도(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인 남편을 둔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5년 연금개혁에서 도입)철폐는 3조 엔의 증수효과가 있음
- 이런 증수 상당액은 2015년도 조세 및 사회보장개혁과 예산편성을 통하여 양육급부에 충당되어야 함
- 나아가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세대가 퇴직세대를 지탱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

- 일본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생산성증가율도 과거 수준에 그친다면 2040년에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
- 잃어버린 20년에서도 1%정도 성장했던 일본경제는 앞으로 축소 악순환과 장기정체에 빠질 리스크에 직면해있음

□ 지식자본 투자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해야

- 일본에서 혁신이 진전되지 않은 요인의 하나는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가 뒤쳐진데 있음
 - 지식자본은 연구개발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외에 네트워크 구축, 빅 데이터의 축적·활용, 마케팅, 브랜딩 등 다양함
 - 일본의 지식자본과 물적 자본 비율은 미국의 2대 1과 정반대인 1대 2임
- 기술혁신의 프로세스 자체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
-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외부조직과 공유, 글로벌한 지식을 집약하면서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방식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임
 - 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표를 보면, OECD국가 중 18위로 열세에 있음
- 오픈 이노베이션은 대학 벤처의 역할이 큰 데, 대학의 특허 건수를 보면, 과학적 발견 수준에서 일본이 미국에 떨어지지 않음
 - 그러나 벤처를 통한 상업화는 큰 차이가 있는 바, 과학적인 지식을 기술플랫폼, 비즈니스모델, 금융 등과 결합시키는 스펙터류의 신 결합이 요구되고 있음
-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대학 벤처에 대한 출자세액공제제도를 활용, 대학과의 연대를 통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비약적으로 확대해야 함
- 일본의 생산성수준과 생산성 상승률이 수속경로에 비하여 낮은 것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
- 2020년대 초까지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과 양육정책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우선 수속경로에 올려놓아 과거 트렌드로 결정되는 성장률 1%를 상회하는 성장을 실현해야 함
 - 그 후 수속경로에 따라 최선진국 수준으로 쫓아가야 함. 